

‘평생 고통’ 소아 1형 당뇨, 중증질환 인정 길 열릴까

태안 일가족 사망에 환자 고통 수면 위로
“수년 간 젊은 나이에 사망한 환자 6명”
요양비→급여 및 중증·난치질환 인정 요구
정부 “2월 지원 확대…산정특례는 더 검토”

태안에서 소아 1형 당뇨를 앓는 자녀를 기르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자 소아당뇨 환자의 고통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중증·난치질환 인정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보다 종합적인 부담 경감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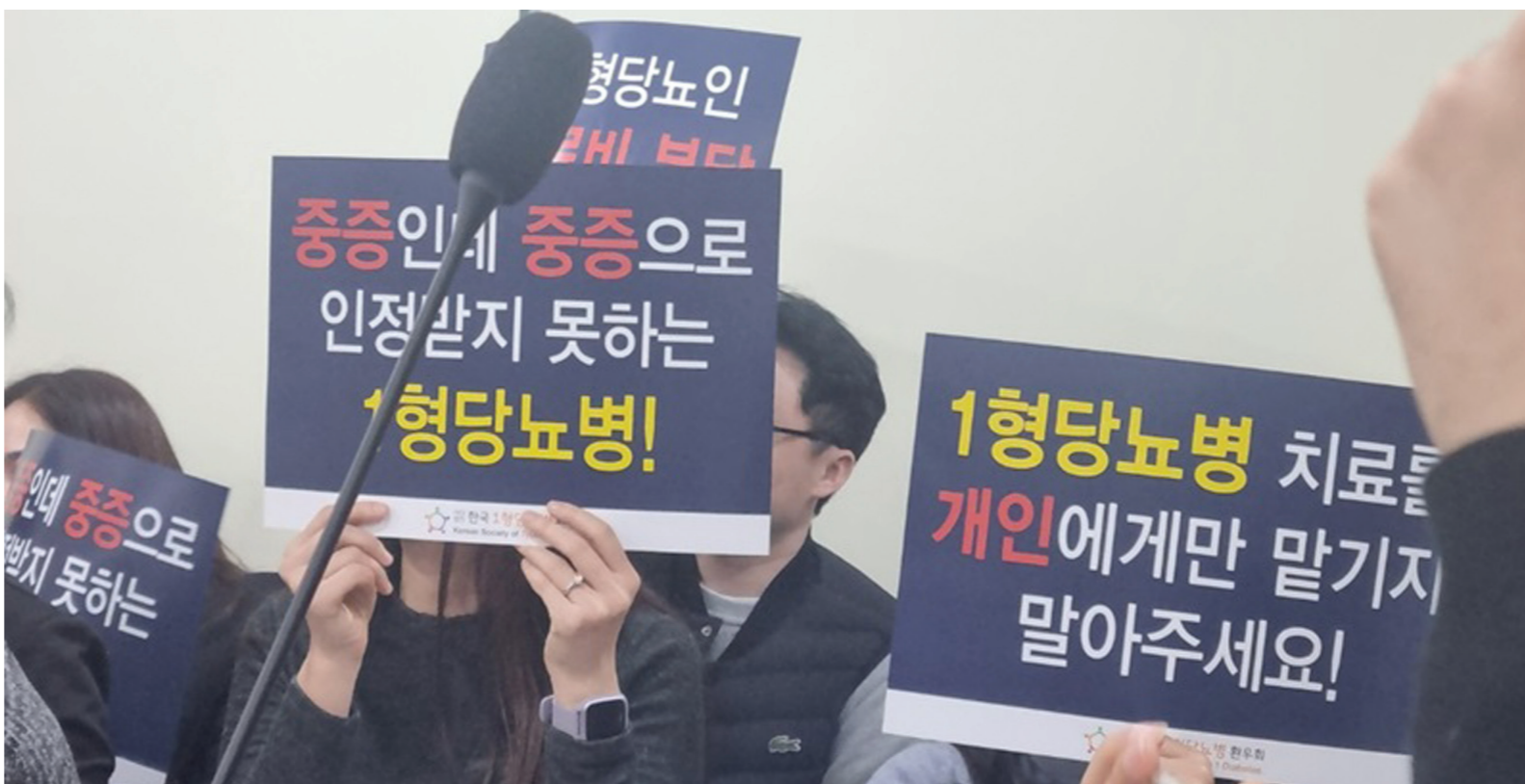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뇨 환자단체는 최근 사망한 태안 일가족 외에도 최소 5명의 소아 1형 당뇨 환자가 어린 나이에 합병증이나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며 치료 지원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와 대한당뇨병연합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갑작스러운 극심한 저혈당, 혹은 고혈당과 합병증, 혹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채 지난 수년 간 사라져 간 젊은 당뇨병 환자가 양 기관의 회원들을 포함해서 최소 6명”이라며, “여전히 많은 아이와 가족들이 조절되지 않은 혈당과 사회적 인식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고통 받는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단순히 요양비 지원을 추가하는 것만이 전체 문제해결은 아니다”라며 “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지, 1형 당뇨병이 장애 질환으로 인정돼야 되는지, 부디 우리와 당뇨병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소아 1형 당뇨는 특별한 예방법이 없고 조기에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급성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해야 하며,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펌프 등 기기가 필요해 경제적 부담도 따른다.

정부는 요양비 방식으로 소아 1형 당뇨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요양비는 전문의 처방을 받은 후 직접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구입한 뒤 거래명세서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일정비용



의 금액을 환급 받는 제도다.

그러나 소아 1형 당뇨 환자 단체들은 요양비 제도는 절차와 청구 방식이 복잡해 수급률이 낮고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전문의약품과 같이 환자가 본인부담금만 내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요양급여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태안 일가족 사망에 이례적으로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당초 3월 말 시행 예정이던 소아당뇨 관리기 부담 완화 정책을 한 달 앞당겨 2월 말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월 말부터는 19세 미만 환자가 가장 고기능인 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 펌프를 구입할 때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부담금은 381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완화된다. 월 19만원 수준인 연속혈당 측정기 부담은 월 10만원 수준으로 인한다.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통해 인슐린펌프 관련 교육을 처방 시 의사 교

육을 6회에서 8회로, 간호사 환자 사용 교육을 8회에서 12회로 늘린다.

다만 요양비를 요양급여로 전환하거나 소아당뇨를 중증질환으로 인정해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심장·뇌수술 30일, 암 등은 5년 등 치료기간을 한정해 적용하기 때문에 평생 관리가 필요한 소아 1형 당뇨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조기 시행으로 소아당뇨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행 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의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와 치료기간을 특정해 운영하는 산정특례제도 취지를 고려해 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소아당뇨환자와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2006년생 여성 HPV백신 무료접종 올해가 마지막

질병청, 만 12~17세 겨울방학 접종 권고
1997년생 저소득층 여성 올해까지 지원

2006년에 태어난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Human Papillomavirus) 백신 무료 접종이 올해 12월부로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무료 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유료로 접종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HPV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인 12~17세 여성 청소년(2006~2012년생)들에게 겨울방학 기간 HPV 백신을 접종할 것을 14일 권고했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이 되는 HPV 감염증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서바릭스 2가 백신과 가다실 4가 백신을 활용한다. 자궁경부암과 항문생식기암, 구인두암 등 HPV에 감염돼 걸릴 수 있는 암은 예방 접종으로 70~90% 이상 막을 수 있다.

HPV에 노출되기 전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주요 원인인 성 경험 이전에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HPV 백신 1차 접종을 15세 이후 접종하면 3회를 맞아야 하지만 14세 이전에 접종했으면 2번만 맞으면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인 18~26세(1997~2005년생) 여성도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올해 마지막 지원 대상자인 2006년생, 만 26세인 19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올해 12월31일까지 1~3차 HPV 백신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12세(2011~2012년생) 여성 청소년에게는 접종 시 초경 등 성장 발달 관련 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무료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HPV 1차 접종 후 6개월 이내 접종하지 못했더라도 접종할 수 있다.

질병청은 12세 남성 청소년도 HPV 백신 무료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1차 접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다. 백신 종류도 2, 4가 백신에서

가격이 높은 9가 백신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향후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HPV 백신 접종은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학업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청소년들은 방학 기간을 활용해 충분한 면역력 획득을 위해 접종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윤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